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45
----------	------

발의연월일 : 2021. 1. 13 .

발 의 자 : 이해식 · 양정숙 · 진성준  
이상헌 · 한병도 · 노웅래  
인재근 · 이학영 · 서영석  
오영훈 의원(10인)

### 제안이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대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가 저임금·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으나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들을 보호·지원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필수노동자가 재난 상황에서 평상시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필수노동자가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극복 및 포용적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재난의 대응·복구 과정 및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대면 업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노동 과정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무수령자 및 국민의 책무와 필수노동자의 권리·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7조).
- 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마. 필수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수노동자 관련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협회의 설립 및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24조).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하여 대면 노동이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국가 재난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대면업무”란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환경, 통신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국민과 필수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3.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일상생활 유지 등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를 통한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업종 중 제12조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업종을 말한다.

4. “노무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5. “필수노동자”란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6. “노무수령자”란 필수노동자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재난극복과 사회기능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보호 강화,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의 안정적·지속적인 근로를 위한 고용조건 개선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
2. 긴급상황 시 필수노동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등 재정지원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예방접종 등 의료조치 제공
4. 재난 시 돌봄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가족 및 자녀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5. 유해 환경에 빈번히 노출되거나 특정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높은  
업종의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지원

6.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국가는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  
하여야 한다.

제4조(노무수령자의 책무) ① 노무수령자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사  
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필  
수노동자를 존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무수령자는 필수노동자의 안정적·지속적인 근로를 위하여 안  
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고용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노무수령자는 재난 상황에 따라 필수노동자의 업무의 수행과정  
을 수시로 조사하여 추가 인력과 장비 등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와 사회기능 유  
지를 위하여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필수노동자를  
존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필수노동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난 상황 극복  
과 복구, 국민의 생명 및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수노동자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필수노동자의 권리와 책무) ① 필수노동자는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재난 등 긴급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노무수령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필수노동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노무수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업무영역별 필수노동자 지원 주체의 지정 등) ① 제12조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는 필수노동자의 업무영역별로 적절한 지원 주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경우에 국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을 받아 업무영역별 지원주체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필수노동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기간산업 및 시설 종사자
2. 대학부속병원을 포함한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종사자
3. 전국단위 물류유통업 종사자
4. 2개 이상의 인접하지 않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정기노선으로 연결하는 시외고속버스, 시외직행버스, 시외버스, 철도 등 전국단위 대중교통 종사자 등

5. 중앙행정기관의 청소 및 폐기물 관리업무 종사자
6. 중앙행정기관의 통신 관리업무 종사자
7. 그 밖에 재난 시 국가가 지정하는 필수업종 종사자

③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도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 종합병원을 포함한 2차 진료기관 종사자
3. 시·도의 물류 유통업 종사자
4.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 시·도가 관리하는 대중교통 종사자
5. 시·도의 청소 및 폐기물 관리업무 종사자
6. 시·도의 통신 관리업무 종사자
7. 그 밖에 재난 시 시·도가 지정하는 필수업종 종사자

④ 시·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군·구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및 돌봄, 보육서비스 종사자
2. 개인병원을 포함한 1차 진료기관 종사자
3. 시·군·구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 등의 지역 대중교통 종사자
4. 시·군·구의 청소 및 폐기물 관리업무 종사자
5. 공동주택의 경비 및 미화, 관리업무 종사자
6. 시·군·구의 통신 관리업무 종사자

7. 그 밖에 재난 시 시·군·구가 지정하는 필수업종 종사자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재난 시 필수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재난 시 필수노동자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협력 등 민관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8.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국민 대상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도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계획(이하 “시·도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기본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별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수립된 시·도별 기본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 및 산업구조,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필수노동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사항
3.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4. 업무영역별 필수노동자 지원 주체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정부 측 위원과 민간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 노무수령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노사관계 등 노동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5.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6. 필수노동자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전국단위 노동조합, 필수노동자 협회 등의 종사자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단과 필수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사전 검토 및 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시·도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시·도별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이하 “시·도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시·도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8조(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치) 국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장 보호지원 시책추진과 민간과의 협력

제19조(민간조직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참여 독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소관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수노동

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민간조직을 우대할 수 있다.

제20조(전자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소비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시행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기업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자원봉사자의 필수노동 제공과 보호) ① 노무수령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필수업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노무수령자는 제1항에 따라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확보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 및 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수노동의 정의, 범위 및 중요성
2. 필수노동 보호 및 지원 방안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필수노동자협회) ① 필수노동자는 필수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수노동자 관련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노무수령자는 재난 시 필수노동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사항을 협회와 협의할 수 있다.

제24조(공제사업) ① 협회는 필수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25조(포상 및 평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처우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를 우수하게 실천한 공공기관
2. 소속된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처우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를 달성한 민간기업 및 조직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성과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